

해양수산부 '여수엑스포 개최 계획안' 내용

순천~여수 박람회장 고속전철 운행

해양수산부가 15일 마련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은 여수 엑스포 유치에 관한 종합 계획이다. 특히 여수박람회 특별법 추진은 정부 차원의 박람회 유치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에서 박람회 유치에 긍정적 효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지난 2004년 12월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재가를 통해 확정된 2012 여수 세계박람회 유치 및 개최 계획을 구체화한 내용으로 조만간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지원위원회 보고를 거쳐 14개 항목(61개 세부 항목)에 대한 답변서 형태로 BIE(세계박람회 사무국)에 보고된다.

정부는 또 한명숙 총리 주재로 오는 17일 정부 유관부처, 전남도·여수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정부 차원의 여수박람회 종합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해수부가 마련한 여수 세계박람회 개최 계획안의 주요 내용을 점검한다.

◇개최 조직 및 운영=우선 2012 여수 세계박람회 특별법 제정을 통해 박람회 유치를 위한 조직, 지원시설, 지원방법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박람회 운영조직의 구성 및 성격 재원조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담을 계획이다.

여기에 참가자 편의를 위해 무비자 입국을 추진하고 여수를 특별보세지역으로 지정, 전시 사용 물품의 비과세 조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IT(정보통신) 박람회 구현을 위해 박람회장에 가

콘도·아파트 4,500실 '엑스포 타운' 건설 참가자 무비자 입국·전시 물품 비과세

상 체험관을 조성하고 도우미 로봇, 시설 관리 로봇 등을 현장 배치한다.

◇교통 대책=국제공항과 여수공항간 국내 연결 노선(인천, 김포, 제주, 김해, 무안)의 증편 및 신설을 추진하고 박람회 유치시 여수공항 활주로도 확장한다. 여기에 국제여객항과 여수항과의 연계 노선을 신설하고 박람회 부지 내 크루즈 전용 부두를 건설한다.

박람회장까지 고속열차 및 임시 열차를 운행하는 한편 순천~여수간 전철화 사업 및 엑스포 역을 신설하기로 했다.

목포~광양, 전주~광양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한편, 국도 17호선, 17호선 우회도로, 여수산단 진입도로 등 3개의 도로망을 구축, 접근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박람회장 외곽에는 1만1천500대 규모의 환승주차장을 설치하고 오토도와 연계되는 모노레일을 운영, 박람회장 주변 시설 이용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숙박대책=숙박시설이 부족하다는 점은 여수엑스포 유치의 걸림돌. 이를 위해 정부는 박람회장 부지 내 일반 및 고

급 콘도를 설립하는 한편, 신규 건설 아파트도 엑스포 관람객의 숙소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템플스테이 및 홈스테이를 적극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박람회장 인근의 덕충동 지역에 엑스포 타운(4천500실)의 건설도 추진한다.

◇전시 참가자=해양수산부는 여수박람회에 80개 국가와 10개의 국제기구가 참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예상 관람객 수는 795만명(외국인 43만명)이다.

◇박람회장 사후 활용 방안=박람회 개최를 계기로 여수를 미래형 관광·레저·스포츠 포트로 육성한다는 방침 아래 엑스포 개최 이후 주재관을 해양과학관으로, 부재관을 해양트레이닝 센터로, 국제기구관을 해수온천 및 아쿠아테라피 센터로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전남도·여수시 '4월 실사' 대비 만전

전남도와 여수시는 2012 세계박람회 개최 후보지의 BIE(세계박람회 사무국)의 현지 실사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히하고 완벽히' 대비에 나섰다.

15일 전남도와 여수시에 따르면 따르면 BIE 집행위원장이 카르멘 살베인 단장을 비롯해 곤살레스 로세르탈레스

BIE 사무총장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된 실사단이 오는 4월 9일부터 13일까지 여수 현지에서 실사를 벌일 계획이다.

전남도는 실사단이 도착할 때를 대비해 시민환영대회를 계획하고 '2012 도 전기네스퍼즐대회' 등 이벤트 개최와 후보지권 헬기투어와 광양항 등 시찰 계획

을 완벽하게 수립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22일부터 64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유치준비위원회와 함께 '질서, 청결, 봉사, 친절' 등 엑스포 4대 시민운동을 집중 추진하고 실사 전 1개월간 박람회를 집중 홍보하고 전 국민으로 대상으로 100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해 실사단 방문 때 이를 전달, 전 국민의 유치의지를 알릴 방침이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1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헌 위해선 공감대 형성 됐어야"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 청문회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15일 "헌법에 개선할 점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행 헌법에 개선 여지가 있는지 여부를 묻는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의 질문에 대해 "앞으로 개정이 된다면 여러군데 개선할 점이 있다는 학계의 논의도 있다"며 이 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선호하는 권력구조를 묻는 질문에 대해 "대통령제도 문제가 있지만, 내각책임제도 그 자체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제안에 대해선 "현재는 헌법개정과 같은 정치사안에는 개입할 수 없고, 개입해서는 안 되는 정치적 중립성을 가져야 한다"며 "앞으로 헌법개정에 대한 정승이 제기할 가능성도 있는데 구체적으로 답변할 수 없다"고 입장을 유보했다.

다만 그는 노 대통령이 개헌을 제안하

지 않자 "개헌을 하기 위해선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본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또 대법관 퇴직 후 법무법인에 취직해 매달 4천400만원의 급여를 받은 것과 관련, "일반 국민이 보기에 괴로울 정도로 많은 봉급을 받은 것은 면목이 없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한나라당 이명규 의원이 '사학법 사건과 관련해 정부 측을 대리한 법무법인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만큼 정부 쪽에 유리하게 심리를 진행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한 데 대해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여서(내가) 사학법 사건에 법률상 관여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인물 검증보다는 최근 정점이 되고 있는 '개헌'에 대해 집중 질의하며, 정치공방을 주고받아 눈총을 받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개헌 수용하면 탈당 이상도 검토"

이병완 비서실장, 대통령 개헌안 발의 기정사실화

이병완 대통령 비서실장은 15일 노무현 대통령이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과 관련, "한나라당이 '오케이'하는 조건으로 탈당하라고 하면, 또 탈당 이상의 또 다른 조건을 제시한다면 진지하게 검토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언론재단 초청 포럼에서 '개헌 제안의 진정성'을 위해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을 탈당할 수 있는냐는 질문에 "탈당문제는 진정성 문제와 연결될 문제가 전혀 아니다"며 이같이 밝힌 뒤 "그러나 야당이 진정성을 담보로 탈당을 요구한 적도 없다"

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노 대통령의 임기가 국회의원 임기보다 빨리 끝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단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실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하지 않는 상황은 없으리라 본다"며 대통령 발의를 기정사실화한 뒤 "정치권·학계·국민과의 직접 대화를 통해 여론의 시기에 대한 문제가 바뀔 수 있다면 정치권도 그에 따른 진지한 검토가 뒤따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향후 청와대의 '개헌 로드맵'과 관련, 이

실장은 "국민에게 상세한 설명과정이 필요하다"며 "앞으로의 과정에서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가 생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을 비롯한 야 4당과의 대화 필요성에 대해 그는 "그런 부분은 진행과정에서 필요하면 지체없이 할 필요가 있으며, 대화가 가능한 순간이 오면 형식과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아직은 (대화가) 난관에 봉착해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개헌 시기문제에 대해 그는 "다음 정부로 넘길 경우 새정부의 임기출범과 더불어

개헌 정국에 빠져들 우려스러운 상황이 발생할 것"이라며 "개헌을 추진하는 차기 대통령이 자신의 임기를 1년가량 잘라내지 않으면 다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노 대통령의 개헌 제안이 '정략적'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정략적인 의도가 있다는 가설이 성립하려면 (개헌으로 인해) 야당이 불리해야 한다"며 "정치 지형이 현재 야당이 오히려 유리한 상황인데 정략적이라고 비판하고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개헌이 무슨 흥정거리인가,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일축했다. 유기준 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개헌에 대해 이미 민심과 한나라당은 명확히 답을 했는데 다른 전제조건을 얹기엔 부합할 필요가 없다"며 "한나라당은 대한민국의 민생과 미래를 놓고 노 정권과 흥정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개헌으로 총·대선 동시에 치르면 1천억 절감"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

장병완 기획예산처 장관은 15일 "(개헌으로)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동시에 치르면 각각 선거를 실시할 때보다 1천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장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노무현 대통령의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 제안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장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분석한 결과 대선과 총선을 따로 치를 때보다 함께 실시하면 1천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이는 공휴일이 하루 줄거나 하는 등의 사회경제적 효과를 제외한 순수 예산차원에서의 효과"라고 설명했다.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 장 장관은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현재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어느 정도 더 내고 덜 받는지는 관계부처 협의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겠지만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면서도 국민 부담이 늘지 않는 방향으로 협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조기집행에 대해 장 장관은 "올해 우리 경제 흐름은 상반기 4%, 하반기 4.7%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상반기 경기보완을 위해 예산·금융·공기업 주요사업비의 56%를 집중 집행하면 상반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0.4%포인트 정도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연합뉴스

기술혁신의 선두주자
다재롭고 무한재능 개성으로
세기 보청기

Upgrade 세기보청기

신비

세계스타·세기보청기